

# 여론 눈총·檢 칼날에 행복 “1672억 납부”... 5·18 책임·사과는 ‘미납’

## 2013 이슈 진단

## 2 전두환 추징금 환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K옥션 전시장은 연일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경매를 앞두고 경매 프리뷰에 올라온 작품을 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경자 화백의 ‘여인’, 김환기의 유화 ‘24-VIII-65 South East’, 이대원의 ‘농원’ 등 국내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하다. 1차 경매에 올라온 작품만 80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자만을 위한 공간’에 감춰져 일반인들이 감상하기도 쉽지 않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져온 의미 있는 성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납부로 귀

결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4)씨는 지난 9월 10일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하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가 공소시효(10월 11일)를 한 달 남겨놓고 정리된 셈이다.

특히 광주일보보 ‘시효 5개월 남은 전두환 추징금’ 기사를 첫 보도(5월 7일)에 추징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한겨레 등 중앙 언론사도 이후 추징금 환수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을 기획,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때 맞춰 전씨 자녀의 페이스북커뮤니티 등을 이 과정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광주일보 ‘시효 5개월 남은 전두환 추징금’ 보도 한몫

현재 100억 환수... 완납 할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싸움’

물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개 시민단체는 그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고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5월 관련단체도 전 전 대통령 서울 연회동 자택을 향한 방문, 불법 재산환수를 위한 정부 및 검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이후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압박에 들어가면서 추징금 문제는 끝이 났다. 전 전 대통령이 그간 “통장 잔고 29만만 원”이라며 안 내고 버티던 추징금 미납액 1672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큰 성과다.

지난 1997년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그는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와 친·인척의 추징금 자진납부 성명을 보면서 많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가 뒤늦게나마 추징금 자진납부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끝나지 않은(환수) 싸움’이기 때문이다. 시·도민들이 “(그가) 정말 다 낼까”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

장남 재국씨가 밝힌 자진납부 재산 내역은 ▲전 전 대통령·이순자 여사(90억원·서울 연회동 사저 등) ▲장남(558억원·미술품과 부동산) ▲차

남(560억원·경기도 오산 팜 등) ▲장녀(20억원·경기도 안양 부지) ▲삼남(200억원·서울 연회동 사저 별채 등) ▲삼남 장인(275억원·금융자산) 등이다.

전두환 압류재산 환수팀은 현재까지 공매 등을 통해 이들로부터 100억원 안팎의 재산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확정판결부터 납부까지 16년간 이 기간 불법자금으로 불린 재산의 처리와 친·인척 내 재산 이동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센 이유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징금을 못 낼 경우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시·도민들 사이에선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이 추징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 요구와 5·18 민중항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건설 100억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육성 199억 등

## 광주·전남 예산 속속 확보

###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국비 예산들이 속속 확보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호남고속철도 송정-목포 간 건설 100억원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24억원 ▲동광주~광산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9억원 ▲용두~담양대천 간 도로 확장 20억원 ▲광주·전남대천 복원 30억원 등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상임위에서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올라갔다. 국토위는 또 정부 예산안에서 애초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된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200억원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300억원) ▲압해~압해 새천년대교 건설(15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서 60억원으로 50억원 ▲광주R&D 특구 육성 10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130억원 ▲광주과학관 운영비는 38억원에서 56억원으로 1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100억원을 반영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예산을 100억원으로, 2억원이 반영됐던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예산을 7억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경우 ▲순천선비문화원구원 건립 15억원 ▲화산전남대병원 노후시설 교체 24억원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 11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으며 11일에도 예산소위 예산심사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여야 대립으로 예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전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18억원, 정부 안에 52억5000만원만 반영된 ‘수출산업화를 위한 양식업 조성’ 127억 5000만원 등 예산은 이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예결특위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최종 확보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 계수소위 회의가 여야 간 정쟁으로 파열되면서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에 있어 계수소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유일하게 계수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예산 전문가는 “예산 심사 기간이 짧으면 짧은수록 계수소위 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선비문화원구원 건립 15억원 ▲화산전남대병원 노후시설 교체 24억원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 11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으며 11일에도 예산소위 예산심사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여야 대립으로 예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전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18억원, 정부 안에 52억5000만원만 반영된 ‘수출산업화를 위한 양식업 조성’ 127억 5000만원 등 예산은 이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예결특위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최종 확보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 계수소위 회의가 여야 간 정쟁으로 파열되면서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에 있어 계수소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유일하게 계수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예산 전문가는 “예산 심사 기간이 짧으면 짧은수록 계수소위 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 2013년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강운대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공공기관장 300여명 출신지 영남이 호남의 3배

민주 김영록 의원 조사... 영남 96·충청 34·호남 32명

전국 300여 공공기관장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전국 295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

관 178) 기관장 출신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출신은 51명, 부산·경남 출신은 45명 등 영남 출신은 96명으로 전체 기관장 가운데 34.8%를 차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출신은 32명(11.6%)뿐이었다. 호남은 충청 출신(34

명)보다도 2명 적었다.

30대 공기업 중 현재 공적인 두 곳을 제외한 28개 기업을 보면, 영남 출신은 한국조폐공사 운영대,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토지주택공사 이재영,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등 8개 기관장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출신은 한국수력원자력 조석(전북), 방승광고진흥공사 이원찬(전

북)으로 2명이 불과했다.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충청은 충남 3명, 충북 2명으로 5명이었다.

87개 준정부기관에서는 영남 인사 편중이 더욱 심했다. 공적 5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 중 경북 19개, 경남 14개 등 영남 출신이 33개(40.2%) 기관장을 차지했다. 서울 출신은 20개(24.4%), 충청 10개(12.2%), 경기 7개(8.5%), 호남 7개(8.5%), 강원 3

개(3.7%), 제주 2개(2.4%) 순으로 차지했다.

178개 기타 공공기관장도 영남 출신이 55명(33.1%)으로 선두였고, 서울 출신이 43명(25.9%), 호남 23명(13.8%), 충청 19명(11.4%), 경기 13명(7.8%), 강원 7명(4.2%), 제주 6명(3.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취임 초기부터 부적격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보은인사와 영남 편중인사로 국민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계를 향한 "마시마 문화의 창" 광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준공됩니다.

2014년에 준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시설로서 아시아 문화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발전하는 문화 발전소입니다.

■ "문화에너지"가 순환하는 도시가 조성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7대 문화권으로 조성, 문화벨트화하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됩니다.

■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조성·운영합니다.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 내 감면  
문화·관광산업 등에 3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재단, 아시아문화기술포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전시관, 문화예술교육개발센터

**민중문화교육원**  
민중안전당회기념관, 아시아문화교육지원센터, 방문재해서비스센터

**문화창조원**  
문화콘텐츠개발지원센터, 문화콘텐츠제작지원센터, 복합전시관

**아시아예술극장**  
대극장(다목적 가연형 / 2,000석), 중극장(무대 고정형 / 520석)

**아시아문화연구원**  
아시아 지식 연구소, 아시아 외향 연구소, 과학 디자인, 테마 박물관 등 조성

**시각미디어문화관**  
중화 예술 빌딩, 도시 역사 박물관 등 조성

**문화전당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예술인 공연거리, 아시아 음악거리 조성

**교육문화권**  
사구 박물관 주변 문화예술극장 및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운영

**아시아문화교류권**  
남구 사직공원, 양평동 일대 공평거리, 아시아 음악거리, 아시아 문화관광거리 조성

**아시아전승문화권**  
남구 대촌, 칠석동 일대 현대적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테마파크 조성

**문화관광권**  
문화관광진흥사업(부동산·광주호 일대, 영산강·황룡강 일대) 생태문화관광 조성, 아시아 자연 문화 연구센터 등 설립

**문화에너지권**  
문화에너지순환사업(부동산·광주호 일대, 영산강·황룡강 일대) 생태문화관광 조성, 아시아 자연 문화 연구센터 등 설립

**대응업종** : 문화산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원 등

**투자진흥지구 권역**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위 치 |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  
사업내용 | 공연, 전시, 음악, 액 등

**CGI센터권역**  
위 치 | 광주 남구 송암로 61 일원  
사업내용 | 첨단 방송 및 영상

**KDB빌딩**  
위 치 | 광주 서구 천변로 268  
사업내용 | 캐리커, 에이전시, IT 등

**대원빌딩**  
위 치 | 광주 동구 천변로 369  
사업내용 | 게임 등